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핵심은 'K-컬처'

도, 과잉 투자 대신 콘텐츠 중심 소프트파워 경쟁 내달부터 12월까지 네 차례 걸쳐 국민 여론조사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본격적인 행보를 통해 유치추진에 본격 나섰다. K-컬처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과잉 인프라 투자 대신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앞세운다는 계획이다.

조영식 전북자치도 전주 하계올림픽 추진단장은 11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제 13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주는 K-컬처의 분할이 전통문화의 중심지"라며, "가장 한국적인 문화올림픽을 실현해 세계인이 공감하는 새로운 올림픽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K-컬처가 가진 글로벌 영향력을 강조하며, "K-컬처는 이미 전세계 팬덤과 시장을 갖춘 강력한 콘텐츠"라며, "K-팝, K-푸드, K-드라마, 한국 등 한국인의 고유한 매력을 올림픽 전면에 녹여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틱톡·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K-컬처 시장은 2024년 약 760억 달러

에서 2030년에는 1,43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트위터에서 'K-POP' 관련 트윗이 약 78억 건에 달할 만큼, 콘텐츠 파급력은 막강하다.

전북도는 이러한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IOC의 변화된 가치(지속가능성, 디지털 전환, 청소년 참여) 등에 부합하는 새로운 올림픽을 구성 중이다.

특히, 전주만이 가진 전통문화 자산과 진정성을 강조하며, 경쟁 도시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전주는 유치 전략을 3단계로 나누어 실행할 계획이다.

첫째, 유치 단계에서는 글로벌 K-컬처 팬덤을 대상으로 한 SNS 챌린지, IOC 대상 프레젠테이션, 온라인 홍보 콘텐츠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다.

둘째, 개최 단계에서는 K-팝 공연,



조영식 전북자치도 전주 하계올림픽 추진단장은 11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제 13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가장 한국적인 문화올림픽을 실현해 세계인이 공감하는 새로운 올림픽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식 체험관, K-뷰티·K-패션 전시, 한옥 숙소 등 한국적 콘텐츠를 올림픽 행사 전반에 통합해 '문화 올림픽'을 구현한다.

셋째, 폐막 이후에는 전주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속적인 문화·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끌어내는 구상이다.

추진단은 e스포츠의 국제적 인기를 활용해 정식 종목 채택을 선도하고, 청소년 참여형 온라인 대회를 개최하는 등 미래 세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신인 IOC 위원장의 공약과도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도 본격 추진한다. 추진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해 국민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4세 이상 남녀 4,000명이며,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올림픽 유치 인지도 △기대 효과 △우려 사항 △참여 의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올림픽 유치 명분을 강화하고 향후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 단장은 "2030년 대회가 열린 무렵 중심 세대가 될 청소년들의 의견까지 포함해 미래 세대의 열망을 담은 유치 전략을 펴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6월 23일 '별도 민·유치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내 홍보도 본격화한다. 현재 온라인 광고, SNS, 콘텐츠 마케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규모 홍보가 진행 중이다.

또한, 조 단장은 올림픽 주요 경기장 배치에 대한 윤곽도 6월 말~7월 초 공개될 예정이라며, 단계별 유치 실행 계획을 지속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공공기관 이전 부진" 정중복 도의원, 도청 질문서 "기관 특성 맞춘 유치 전략 인센티브 강화 필요"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주3)은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청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먼저 김관영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성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55개 유치 대상 중 실제로 이전 의사를 밝힌 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기관 특성에 맞는 유치 전략과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반부패 고위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인해 행정 공백이 길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강력한 처벌과 청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서거세 교육감을 상대로 학업중단 학생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속려제 참여율과 효과가 낮은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전주시 완산구 일부 지역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구 7만, 학생 5천명에 달하는 지역에 인문계 고교가 한 곳도 없다"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교 신설과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도청과 교육 현장의 실태를 날카롭게 짚고 실용성 있는 대책을 요구해 주목을 받았다. /이만호 기자

"치매 노인 AI 돌봄인형 보여주기식으로 전략" 임승식 도의원, 도청 질문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년간 비대면 돌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3월 도지사 지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같은 해 7월 기금 투입이 시작되는 등 매우 빠르게 추진됐다"며,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에서 실시한 2023년 자체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억력과 우울감 개선 폭은 평균 1점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2024년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지속했다.

이에 임 의원은 "총 5억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 분석 자료와 예산 대비 효과 수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돌봄인형은 초기 관심이 높을 때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낮아져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대여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보급 없이 잘 활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료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尹 내란 특검, 역사적 단죄 출발점"

민주 이성운 의원 "반드시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을)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특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특검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한 윤석열 정권 진상규명 3대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제 특검 임명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그중에서도 내란특검은 가장 무겁고도 중대한 책임을 지는 수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며 "사건 지휘권과 이첩요구권을 가진 특검이 수사뿐 아니라 재판 과정도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소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점,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 다수가 곧 구속만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하고 유능한 특검이 수사와 공판 모두를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현 공소장은 윤석열이 왜 불법계엄을 시도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내란범죄의 핵심인 범행 동기와 목적을 반드시 규명해 공소장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정권식 영구집권이 목적이었는지, 본인과 부인의 비리를 덮기 위한 시도였는지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내란특검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3대 특검법이 왜든나처럼 시행된 만큼, 이제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과 내란 의도를 낱알이 밝혀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尹 겨냥 '3대 특검법' 의결... 신속 수사 가능성

대통령실 "왜곡된 입법 질서 바로잡고 국민 뜻 반영한 결정" 이르면 주말 특검 임명 완료 후 내달 초부터 수사 본격화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전격 통과되어 신속한 특검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하루 전인 9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단 하루만인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거치며 이례적인 속도로 신속히 처리됐다.

아직 새 내각이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무회의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됐던 장관들이 그대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 기능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국무회의는 이러한 왜곡된 입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3대 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은 특히 규모와 수사 범위 면에서 역대 최대급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하의 국지 총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계엄령 명분을 만들려 했

다는 의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전직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가능성, 언론 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른바 '법조 4인방'으로 불리는 김주현, 박성재, 이상민, 이원규 전직 고위 법조인들이 계엄령 선포 직후 안가에서 비밀리에 만났다는 정황도 핵심 수사 항목이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 민간인 건진 법사(분령 전상배)를 통해 명품 사냥백과 고가의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총 16가지 혐의를 겨냥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 역시 고위 공직자와 재계 간 유착 및 국정농단 의혹 등 주요 사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검 수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특검 임명이 완료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고, 이후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수사팀 구성이 이뤄진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은 14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내

란 특검에는 검사 60명을 포함해 총 267명까지 투입될 수 있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특검보다 두 배 이상 규모로 진행되며 역대 특검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3대 특검은 정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과 수사 착수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강조한 '통합'은 어디로 가고, 국정 첫걸음부터 갈등과 정쟁을 택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감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기존에는 검찰총장만 가능한 검사 징계 청구권을 이제는 법무부 장관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예고했던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본격적으로 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들은 이번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시행한 비상계엄 조치의 내란에 대한 심판 성격의 투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무려 289만여 표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한 바 있다.

이처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빠른 속도로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보수 야당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대립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국가 대표산업, 전북에는 없다"

김대중 도의원, 도청 질문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도의원(익산 1)이 11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도청현안에 대한 질문과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김대중 의원은 대광법 개정과 새민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에 대하여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북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대광법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광법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도로 50%, 철도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 국비 100%로 지방비 부담 없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도가 기업유치 실적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며 도 기업유치정책방향

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유치 실적평가에서 민선 8기 이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사께서 기업유치와 경제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북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없다는 사실은 전북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새 정부가 시작되는 지금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신산업의 주도권을 전북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한발 앞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도 최근 문제가 제기된 도 감사위원장 내부채용 문제와 민생경과 감사장의 잦은 교체, 행안부 미승인 과건 등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을 가볍게 무시하고 잘못된 관행과 편익만을 생각한 안일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만호 기자